

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 정착

마늘·양파·가을배추·건고추 등 총 7개 품목으로 확대... 참여 농가 수 대폭 증가 예상

전북도가 민선6기 삼락농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가격차액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범사업 첫 해인 2016년도에는 14개 시군에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가을무, 가을배추를 대상품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27농가가 사업을 신청

했으나 대상품목(가을무·배추)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가격차액 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일부 시군의 대상품목 재배면적 및 농가가 적어 사업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군 농정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2개의 대상품목을 도에 추천하고 마늘, 양파, 가을배추, 건고추 등 총 7개 품목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전년도 기파종(정식)된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하는 전주시 등 4개 시군의 사업신청을 추진한 결과 199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4개 시군의 사업신청

대상인 가을무, 가을배추의 87.7% 수준으로 정향후, 14개 시군에 5개 품목을 더 신청받을 경우 전년도보다 참여 농가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품목별 농업인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지역농협의 사업신청 체계를 수시 점검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와 중소농가가 향후 기상상황, 수확시기 등에 따른 가격 등락폭이 클 수 있음을 대비해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은 향후에도 품목별 사업 신청·접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농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품목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참여 신청 농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분사업 확대 여부와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 간 수급상황과 가격을 점검하는 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

올해 곰소만 일대 복원

전북도는 전국 갯벌면적 2,487.2㎢ 중 118.2㎢로 4.8%에 불과하지만 자연생태의 원시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물과 수산생물, 멸종위기 종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해양수산부로 지정됐다.

또한 고창 갯벌 및 부안 갈포만 갯벌이 랍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되는 등 쾌거를 이뤘으나, 지난 수십년간 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돼 면적이 줄어든 갯벌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고창 심원면 지역 갯벌 복원에 71억원을 지원한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고창 갯벌 및 부안 갈포만 갯벌의 보전·관리 등에 총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의 시범사업 일환으로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인간과 갯벌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갯벌 생태 관광지 육성에 총 2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확대되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과거 간척지 사업으로 논경지 및 염전화된 곰소만 일대의 기존 방조제 정비와 갯벌 식생조성 등으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지원되며,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지역 방조제 제거 및 내측 복원 0.39㎢에 활용돼 담수유입 및 해수유입을 통한 갯벌 환경 복원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갯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도지사, 부안군 찾아 희망대화 진행

"'내소사권역 개발사업' 삼락농정 성공모델 만들겠다"

송하진 도지사는 8일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다섯 번째 방문지로 부안군을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조병서 도의회 부의장, 최훈열 도의원, 오세용 부안군 의장, 방문지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송 지사는 먼저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의 혁신적인 모델인 부안군 '내소사 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내소사권역 종합개발은 2011년부터 진서면 석포리 일대 6개 마을이 힘을 합쳐 주민 주도로 추진한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권역센터와 주차장,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 구장, 농산물가공판매장 등이 올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내소사 방문객과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송 지사는 "내소사 권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아영장 등이 있는 지역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사업이 완료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농촌관광의 선두주자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소사 권역 마을이 농촌관광으로 소득을 올리고, 활력 넘치는 마을, 사람 찾는 농촌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내소사권역 종합개발사업이 삼락농정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지사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부안 변산면에 위치한 모



송하진 도지사가 8일 2017년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로 부안군을 방문해 김종규 부안군수와 변산면에 위치한 모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에서 침수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항 재해위험 개선지구를 방문해 침수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모항 재해위험지구는 30년 국도 북측의 외부 산지유역에서 유입수가 흘러들어오는 반면 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2011년과 2012년에 5동의 건물이 침수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 시 인근 주택과 농경지 등에 상습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이다.

송 지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모항에 더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을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도, 산림자원 목재 에너지화 추진

도내 산림소득자원을 이용한 지역별 임산물 특화방안과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으로 목재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화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 삼락농정 산림분과위원회는 지역 전문가들과 전북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지자원이용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밤 토론회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4차례 거쳐 논의한 결과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전북의 임산물 생산액을 전국 대비 현재 10%를 12%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산림을 기반으로 목재펠릿 등의 에너지 자원화와 목재산업 활성화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인재용 기자

익산 장점마을, 지하수 등 수질 이상없어

암 환자 집단 발생 지역

전북도는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의 지하수 등 수질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밝혔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 80여명 가운데 10명이 암으로 숨진데 이어 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이 마을 7구구의 지하수와 배수로, 호소수, 인근 비료 공장 내 방치시설에 저장된 오수 등을 조사했다. 지하수 조사결과 7구구 중 4구구는

적합, 3구구는 질산성 질소만 기준을 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질산성 질소는 농사용 비료 등을 사용하면 흔히 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수로와 호소수에서도 수은,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호수수에서는 불소가 미량 검출됐다.

이 공장의 오수에서는 일반 오염물질이 검출됐으나 가축분뇨 정도의 수질상태라고 도는 덧붙였다.

최재용 도 환경복지국장은 "환경적 요인도 검사 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시와 협의해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이나 역학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간소화

개선안 심의 완료... 법 개정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해 허가 절차 간소화한다.

현재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었다.

또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경

관·안전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에 걸리는 1년 이상이 소요돼 점·사용허가 신청이 어려웠다.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복되는 행정 절차가 개선되어 허가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며, "개선안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한 '동의 절차 간소화 지침'에 따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간소화 대상 사업과 동의 절차 간소화 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새만금 소식·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